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87
----------	-------

발의연월일 : 2018. 9. 28.

발 의 자 : 남인순 · 박완주 · 김병기  
백혜련 · 금태섭 · 권미혁  
기동민 · 송옥주 · 최인호  
윤관석 · 이춘석 · 임종성  
의원(12인)

### 제안이유

2018년 현재, 현행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중앙자활센터 1개,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는 광역자활센터 14개소 및 지역자활센터 249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으로 설립되고 서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립·자활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의 적극적인 실시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처리·기록·관리하는 정보전산망의 구축이 필요하나,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5조의2,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9까지 신설).

나.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광역자활센터를 두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5조의10).

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함(안 제18조의3).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안 제18조의6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10으로 하고,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10(중전의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

이 한다.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자활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지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5조의4(임원)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1. 자활지원사업·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보통신·교육훈련·경영·경제·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

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광역자활 센터를 둔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을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를 “위하여”로, “적립할 수 있다”를 “적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를 “자활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5제2항 중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를 “교육기관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설치·운영하거나”로 하고, 제3항 중 “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를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활복지개발원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계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2조제3호 중 “제15조의3”을 “제15조의3, 제15조의10”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활센터는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자활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자활복지개발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로는 자활복지개발원의 명의로 본다.

⑤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중앙자활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중앙자활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활복지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중앙자활센터의 소속 직원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일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3에 따라 보장기관이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법인등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자활센터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u></li> <li><u>2.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u></li> <li><u>3.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u></li> <li><u>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u></li> <li><u>5.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u></li> <li><u>6.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u></li> <li><u>7.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u></li> </ol>	<p><u>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li> <li><u>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u></li> <li><u>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li> <li><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li> <li><u>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u></li> </ol>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사회  
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  
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  
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

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  
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  
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  
계 구축·운영

5. 자활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6.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  
상자 관리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 제15조의1  
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  
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  
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  
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

<신 설>

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  
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5조의4(임원) ① 자활복지개발  
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  
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  
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  
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  
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  
명한다.

1. 자활지원사업·사회복지 분야



<신 설>

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보통신·교육훈련·경영·경제·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

<신 설>

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신 설>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다.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광역자활센터를 둔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② (생략)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생략)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

제18조(자활기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  
-----  
-----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  
-----  
-----위하  
여-----적립한다.

② -----  
-----  
-----  
-----자활복지개발원-----  
-----  
-----  
-----.

<p>이 부담한다.</p> <p>③ (생 략)</p> <p>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p> <p>③ (생 략)</p> <p><u>&lt;신 설&gt;</u></p>          <p>④ (생 략)</p> <p>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①</p> <p>(생 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u>교육기관</u>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u>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단체 등에</u>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u>&lt;신 설&gt;</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p> <p>③ (현행과 같음)</p> <p><u>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p> <p>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①</p> <p>(현행과 같음)</p> <p>② -----<u>교육기관을 자</u> <u>활복지개발원에 설치·운영하거</u> <u>나</u>----- -----.</p> <p>③ ----- -----<u>교육기관을 설치·운</u> <u>영하는 자활복지개발원 및 운</u> <u>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6(자활지원사업 통합정 <u>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①</u> <u>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u></p>
--	--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 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계 전산망 또는 자료의



<p>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2. (생략)</p> <p>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u>제15조의3</u>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p> <p>4. (생략)</p> <p><u>&lt;신설&gt;</u></p>	<p><u>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u></p> <p>제42조(보장비용)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제15조의3, 제15조의10</u>----- ----- -----</p> <p>4. (현행과 같음)</p> <p><u>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	---